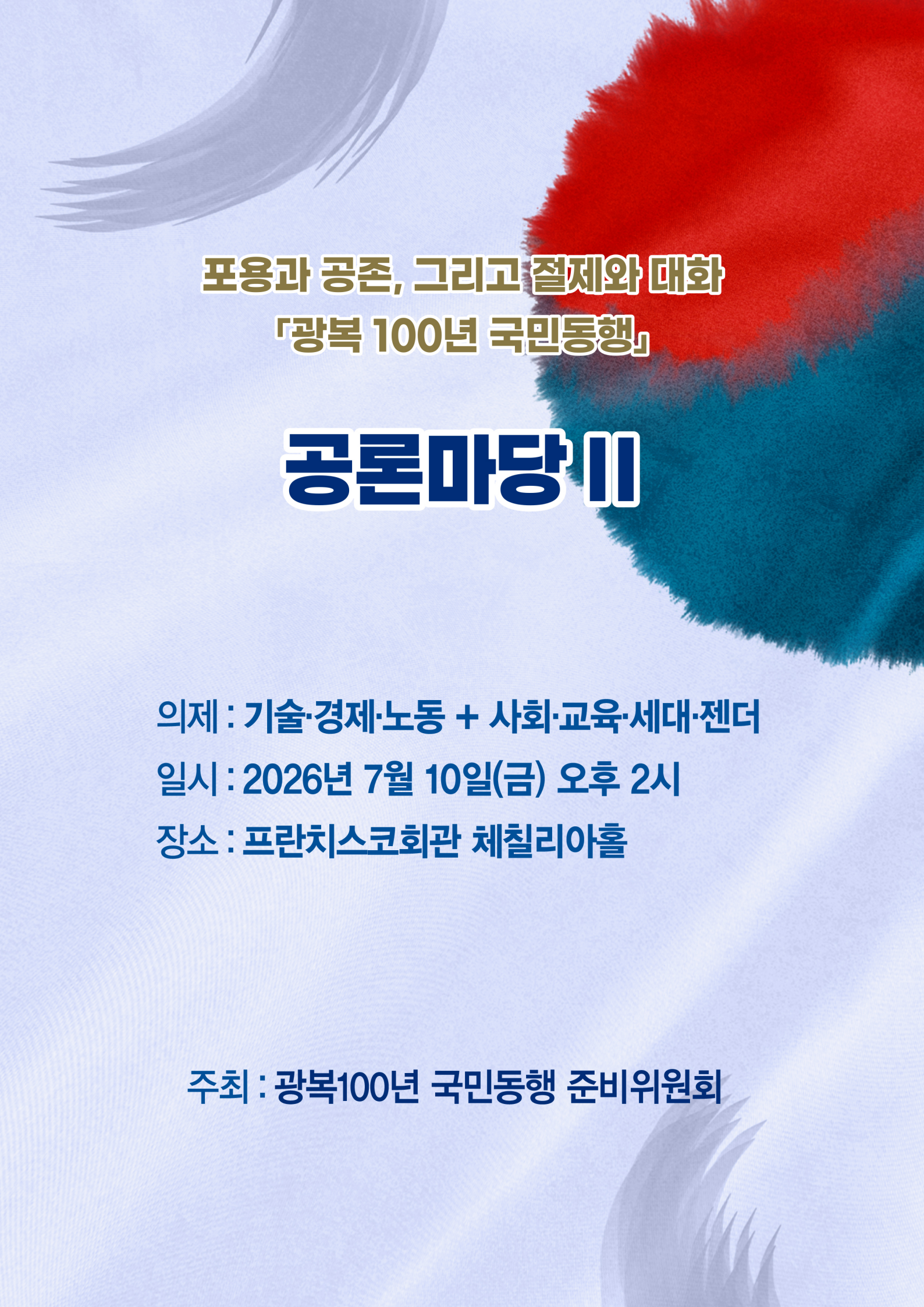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광복 100년 국민동행」

공론마당 II

의제 : 기술·경제·노동 + 사회·교육·세대·젠더

일시 : 2026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주최 :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광복 100년 국민동행」

공론마당 II

의제 : 기술·경제·노동 + 사회·교육·세대·젠더

일시 : 2026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주최 :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행사 프로그램

일시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14:00 – 14:10	10분	개회
14:10 – 14:30	20분	발제 – 기술·경제·노동, 임채성 건국대 명예교수, 기술경영학과
14:30 – 14:35	5분	기술·경제·노동 의제에 대한 지정토론 -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4:35 – 15:10	25분	기술·경제·노동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
15:10 – 15:20	10분	휴식
15:20 – 15:35	15분	발제 – 사회·교육,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15:35 – 15:50	15분	발제 – 세대·젠더, 우석훈 경제학자
15:50 – 16:00	10분	사회·교육·세대·젠더 의제에 대한 지정토론 - 사회·교육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 세대·젠더 장혜영 전 국회의원
16:00 – 16:30	30분	사회·교육·세대·젠더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
16:30 – 17:00	30분	기술·경제·노동 / 사회·교육·세대·젠더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 및 정리

의제 1

기술·경제·노동

[발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 변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디지털·AI 전환 시대, 광복 100년의 산업 —

임채성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 한국 인더스트리4.0협회 테스트베드 그룹 공동의장 | 美 디지털트윈컨소시엄(DTC) SDM(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타이거팀 공동리더)

0. 시작을 위한 질문과 주장

[질문]

- '광복 100년'을 앞둔 지금, 2045년의 산업구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디지털·AI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일과 산업, 나라의 위상을 어디로 데려가는가?¹
- 다섯 가지 대전환이 동시에 겹치며 불확실성이 폭증하는 환경에서, 국민이 앞으로 1~3년 동안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
- 14억 중국과 3억 미국이 판을 주도하는 시대에, 인구 5천만의 한국은 어떤 위치를 잡아야 '위기'를 '도약'으로 바꿀 수 있는가?

[주장]

- 2045년의 산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하드웨어가 중심이고 소프트웨어가 부차적이던 산업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가 부차적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일하는 방식', '사고 파는 방식', '경쟁하는 방식'을 동시에 바꾼다.
- 이 변화 앞에서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마디로 '태도 전환'이다. 정답부터 찾아 완성하려는 하드웨어 중심 태도에서, 싸게 빨리 틀려보고 고쳐가며 완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태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실천 원리가 '싸게 틀려보기', 곧 가정 (A)-실험(E)-학습(L)의 AEL이다.
-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 방식으로 옮겨 가느냐에 있다.

¹이 발제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 조직위원회가 던진 두 가지 질문 — ① 2045년 산업구조는 무엇이 바뀌는가, ② 국민이 향후 1~3년 집중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 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 인구 5천만 나라의 답은 '파트너 + 데모 강국'이다. 선도국과 함께 앞서서 실험하고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 세계의 문제를 푸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 — 이것이 전 인류에 봉사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에 닿는, 광복 100년 한국 산업의 모습이다.

1. 시대를 확인하며 — 다섯 가지 불연속 변화가 동시에 겹친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하나의 기술 변화가 아니라, 여러 대전환이 한꺼번에 겹치는 '판'의 교체다. 그리고 2045년 광복 100주년은, 이 겹친 대전환을 어떻게 넘는가에 따라 나라의 자리가 갈리는 시간이 된다.

-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20여 년 동안 마주할 변화의 판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다섯 가지 불연속적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 ① **디지털·AI 전환**: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지난 40여 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 위에서 사람·기업·사물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연결화(Connectivity/IoT)가 1990년대 이후 넓어졌으며, 다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스마트화가 얹혀 왔음. 이 셋은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 데이터가 있어야 연결이, 데이터가 쌓여야 스마트화가 가능하다는 의존관계를 가지면서도 — 동시에 진행되며 함께 두터워지고, 그 결과 업(業)의 성격 자체가 바뀜. 지금은 그중 스마트화의 한 형태인 AI·AX가 특히 강조되는 시기임.
 - ② **기후·환경**: 극단적 기후·환경 압박의 상시화
 - ③ **에너지 전환**: 탈탄소·재생에너지로의 이행
 - ④ **지정학적 갈등**: 전쟁 노출 위험까지 안은 대립 구조
 - 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분절·블록화
-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가 따로따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일과 산업을 근본부터 다시 쓰고 있다. 여러 대전환이 한꺼번에 겹치니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폭증한다.
 - » 디지털화·연결화·스마트화로 인한 불연속적 변화는 향후 20여 년간 계속될 것이며, 다른 네 축과 맞물려 그 파장을 증폭시킴
- 바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2045년 산업구조가 무엇

이 바뀌는가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앞으로 1~3년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이다. 2045년이 곧 광복 100주년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 곧 나라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돌아보기 — 한국은 이미 네 번, 정답 없이 넘었다

한국의 진짜 자산은 크기가 아니라 방식이다. 정답이 없는 길을 먼저 실증하고, 단계를 건너뛰어 앞서 나간 '건너뛰기&비약 혁신'의 경험 — 이것이 다섯 번째 도약을 감당할 근거다.

- 과연 한국이 이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불연속적 변화를 네 번이나 넘어왔기 때문이다.
 - »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인터넷, 2010년대 스마트모바일·플랫폼.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디지털·AI 전환의 시험대 앞에 서 있음.²
- 이 네 번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 ① **정답 없이 시작했음.** 한 번도 정답을 알고 시작한 적이 없음
 - ② **자동화에 적극 투자했음.** 선도국이 주저할 때 우리가 먼저 뛰어들었음
 - ③ **일자리를 함께 만들었음.** 경쟁력과 일자리를 동시에 키웠음
- 세계의 흐름은 대개 우리보다 5~10년 앞서 있었다. 우리는 늘 뒤늦게 출발했다.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얻는 길은, 뒤에서 출발해도 단계를 건너뛰어 앞서 나가는 것 — 곧 건너뛰기(stage skipping)·비약(leapfrogging) 혁신이었다. 추격이면서 동시에 선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³
- 정답이 없던 길을 먼저 실증하고 세계로 나간 대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 » **CDMA 이동 통신, 디지털 TV,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AI 가속기 반도체 HBM.** 모두 초기 기술 단계에서 국제 공동 데모와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장

²표기된 시기는 세계 흐름이 아니라 한국이 본격적으로 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계 흐름은 대체로 5~10년 앞섰다.

³Lee, K. & Lim, C. (2001), "Technological regimes, catching-up and leapfrogging: findings from the Korean industries," *Research Policy* — 후발국 혁신전략 분야의 마일스톤 연구로 1,900회 이상 인용되었다.

사례임. 정답이 없을 때 먼저 국제 협력으로 실증하고 함께 세계로 나간 것 —
그것이 한국의 길이였음

3. 내다보기 — 2045년, 산업구조는 무엇이 바뀌는가

제품(명사)을 팔던 산업이 서비스를 팔며 제품을 끼워 파는 산업으로 바뀐다. 명사형 산업이 동사형(예: 하기) 산업으로 재편된다. 애플레가 나비가 되듯 업(業)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 — 이것이 '전환(Transformation)', 곧 'X'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이라고 부르곤 한다.

-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중심이고 소프트웨어가 부차적이었으나,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가 부차적이 되는 역전이 시작됨. 지금을 '소프트웨어 중심화 시작기', 2045년을 '성숙기'라 부를 수 있음
- 그림으로 보면, 현재는 기업 간 연결이 부분적이고 회사 안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로 연결이 제한된 '부분적 연결·제품 중심'의 상태다. 향후 20여 년간 기계와 사물이 더 많이 연결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기업 안팎이 자유롭게 이어지며, 여러 AI가 공장과 기업을 넘나들며 일하는 '연결망 생태계·서비스 중심'으로 성숙한다.
-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업(業)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 » PwC는 전통적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산업이 '이동하기(move)·먹기(feed)·돌보기(care)·짓기·만들기·에너지 공급하기' 등 인간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도메인(domains of growth)'으로 재편된다고 봄. 산업이 명사형 업종에서 동사형 필요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뜻임.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물류의 결합 서비스의 출현으로, 자동차 제조사·플랫폼·물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이동하기(모빌리티) 도메인'으로 확장됨.⁴
 - » 현대차가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라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 이는 업의 성격이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판매로 바뀔을 의미. 또한

⁴산업 분류가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재편된다는 관점(PwC[2025], Value in Motion). 자동차 산업이 움직이기 산업으로 바뀌고, 움직이기 산업은 자동차·물류 산업이 포함되는 산업이 되어 기존의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이기 산업은 서로 연결되어 고객에게 '움직이기'를 함께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 구조로 이행한다는 점도 있다.

‘움직이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물류 산업을 넘어 여러 산업이 융합되는 산업이 됨. 즉 기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 짐.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국민의 삶과 연결해 보면 ‘일하기’, ‘팔기’, ‘경쟁하기’를 동시에 바꾼다.

① 일하기(노동) — “어떻게 일하는가?”

- »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사람은 AI에게 일을 설계·검증하고 새 문제를 정의하는 ‘AI 지휘화(Orchestration)’로 이동
- » 자기 전문성과 부서 칸막이를 넘어 다른 분야 및 다른 부서와 융합해 고객 문제를 푸는, 비반복적·창의적인 ‘고숙련 융합직무’로 진화. 지속 학습과 역량 융합이 핵심

② 팔기(가치) — “무엇을 파는가?”

- » 지금은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끼워 파는 시대라면, 앞으로는 서비스를 팔며 제품을 끼워 파는 시대로 바뀔
- »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스스로 AI를 거느리는 고객의 삶의 현장을 깊이 이해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 해주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가치를 측정. 물건도 고객 맞춤형으로 바뀔

③ 경쟁하기(경쟁) — “어디서 경쟁하는가?”

- »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고객에게 무언가를 해주려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혹은 플랫폼 혹은 분산화 연결(federated) 네트워크를 공유해야 함. 그래서 진영(패거리)이 형성되고, 경쟁이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플랫폼·표준 중심의 진영 간 경쟁으로 이동
- » 누가 표준을 잡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 생태계·데이터·표준 지배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됨

- 세계는 이 20여 년을 어떻게 내다보는가. 글로벌 권위 기관들의 전망은 한국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예고한다.

- » 2045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Cebr, 2026 — 이전 예상보다 빠름), 2050년에는 세계 7대 경제 중 6개가 신흥국이 됨. 중국 1위·인도 2위·미국 3

위·인도네시아 4위 순으로, 한국(현재 12~13위)은 여기에 들지 못함.⁵ 디지털 기술 및 AI 기술의 발전은 진영화된 연결 기업간 경쟁을 야기하며 이러한 경쟁에서는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유리함. 오토바이 택시로 출발해 지금은 통합 슈퍼앱이 된 Gojek(현 GoTo)이 인도네시아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은, 인구 많은 후발국 경제가 플랫폼 경쟁에서 갖는 유리함을 보여줌.

» 향후 20여 년 세계 경제는 AI 덕분에 성장이 빨라지되 성장 격차도 벌어질 전망. 2045~2049년 GDP 성장률을 경제학자는 3.5%로, AI 전문가는 5.3%로 내다봄 (Forecasting Research Institute, 2026)

- 따라서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인구 감소와 신흥국 부상 속에서 세계 GDP 점유율이 하락하는 '위기'로, 선도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점유율이 오르는 '도약 기회'로 갈린다. 세계 선도국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국민까지 나선다면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 기업·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이 나서는 나라가 답이다.

4. 보완설명 —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공포의 세 가지 빈틈

-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비관론은 대개 '지금 내가 하는 직무'가 자동화되는 면만 보기 때문에 생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결정적 빈틈이 있다.
 - ①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편'됨.** 사람은 AI를 지휘하는 자리로 옮겨감. 단순 반복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일을 설계·검증하고 새 문제를 정의하는 고숙련 융합직으로 이동함
 - ② **변화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듦.** 업의 성격이 '무언가 해주기'로 바뀌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욕구와 풀어야 할 문제(예: 기후 및 생태 변화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겨남. 그 문제를 푸는 자리에서 새 일자리가 나옴
 - ③ **일자리가 줄지 늘지는 정해져 있지 않음.** 전체적으로 AI가 고용을 줄인다는 분명

⁵세계 경제 중심축 이동 전망은 Cebr(2026) 및 PwC(2050) 자료에 근거한다. 한국의 순위는 대응 여하에 따라 하락 또는 상승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

한 증거는 아직 없으나, 안심할 일도 아님.⁶ 그 나라가 AI를 얼마나 잘 쓰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짐. 다시 말해 우리 하기에 달린 문제임

- 결론은 이것이다.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 방식으로 옮겨 가느냐이다.

5. 살펴보기 — 인구 5천만의 답: ‘파트너 + 데모 강국’

14억 중국·3억 미국과 단독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5천만의 솔직함에서 출발한 유일한 선도 경로는, 선도국과 ‘함께 앞서서 실험하고 함께 세계로 나가는’ 파트너 + 데모 강국의 길이다.

-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라가 유리하다. 더 많이 연결되고 더 큰 진영을 형성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인도네시아 같은 후발국에서 한국보다 활발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5천만의 나라는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는가.
-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길은 하나뿐이다. 큰 나라·선도국이 앞서 치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친구’가 되어 함께 들어가 함께 실험하고,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 » 이는 이미 한국의 역사임. 앞서 본 CDMA, 디지털 TV,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AI 가속 반도체 HBM이 바로 그 예임. 선도적 기술이 나올 때 함께 데모하고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 — 이것이 ‘스케일업(scale-up)’ 데모임
-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얻으면 고용 경쟁력도 함께 오른다. 지향점은 ‘글로벌 AX·DX 데모 스케일업 강국’이자 ‘고용 강국’이다.
 - » 세계 고객의 삶의 현장 문제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함께 푸는, 솔루션 지향의 산업. 세계 선도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확대됨
 - » 기후·생태·개도국 발전에 대한 기여는 글로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확장하는 길이기도 함

⁶지난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연구(예: *The Economist*)의 진단으로, 전체 고용에 대한 AI의 순효과를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으나 낙관도 이르다는 취지다.

- 이러한 방향이 곧 전 인류에 봉사하는 산업을 지향하는 홍익인간 정신이며, 광복 100년을 위해 한국이 추구할 산업 발전의 방향이다.

6. 광복 100년,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 — 국민이 나서는 나라

1945년 광복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다면, 2045년 광복 100년은 '실험하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업 강국이자 고용 강국'이 되어야 한다.

- 이 모든 변화 앞에서,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어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는다면 한 마디로 '태도 전환'이다. 정답부터 찾아 한 번에 완성하려는 하드웨어 중심 태도에서, 싸게 빨리 틀러보고 고쳐가며 완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태도로 옮겨가는 것이다.
 - » 이것이 '싸게 틀러보기'임. 틀러본 적 없는 아이디어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음. '내 아이디어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맞는지, 현장에 먼저 내놓고 틀러 보자는 것임. 아이디어를 '싸게 틀러보기' 실험을 통해 점검하지 않고 고객에 내어 놓을 때 고객이 외면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내어 놓는 '비싸게 틀리기' 대가를 지불하게 됨.
 - » 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이기도 함. 아이디어가 있으면 현장에서 환영 받는 아이디어 인지 현장에 내어 놓아 점검해 보는 것 — 이를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놓고 논하는 것이 탁상공론임
 - »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실행이 어려웠음. 돈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 그러나 이제는 AI와 소프트웨어 덕분에 옛날에 비해 크게 싼 값으로 빠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구체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중심 태도'를 갖추는 실천을 세 마당으로 제안한다.
 - (1) 나 — 국민 스스로 '싸게 틀리기(AEL)'를 실천한다.
 - » 생활 속 실천: 일상의 작은 시도부터 가정을 써 보고, AI·소프트웨어로 그 가정이 틀리지 않았는지 점검

- » 국민 공동 문제 해결: 지역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빠르고 싸게 틀러 보며 실험
- » 직장 안 실천: 신제품·신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틀러 보기에 참여

(2) 우리 — ‘국민 광장’에서 함께 모이고 전달한다.

- » ‘싸게 틀리기(AEL) 아이디어 광장’: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올리고 함께 다듬는 마당
- » ‘실험·학습 광장’: 함께 실험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마당
- » ‘환경개선 제안 광장’: 싸게 틀러 보려 할 때 부딪힌 애로(기업 환경·정부 서비스 등)를 모아 정부·산업계에 전달
- »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 국민이 나서는 나라의 토대

(3) 일 — 새 일자리를 찾아 옮겨간다.

- » 20:30대: 지금 사람이 몰리는 직장은 과거·현재 환경의 좋은 직장일 수 있음. 불확실한 환경에서 유망한 직업은 ‘싸게 틀러보기’로 탐색·점검하고, 그 직업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
 - » 재직 중·고경력자: AI 지휘·고속련 융합직을 탐색하고 그 역량에 투자. 세대를 넘어 누구나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음
- 격동적 변화의 환경일수록 틀러보지 않은 아이디어는 위험하다. 아이디어를 논하는 탁상공론이 빈번하게 존재할 때 현장에 작동하지 않는 ‘비싸게 틀리는’ 대안이 넘쳐나게 된다. 그럴수록 더 빠르게, 더 싸게 틀러보며 문제를 더 잘 풀여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국민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거대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산업이 번성하는 나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경쟁력이 함께 오르는 나라,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 광복 100년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두려움이 아니라 실험으로, 무력감이 아니라 학습으로 —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는 나라. 그 길 위에서 전 인류에 봉사하는 산업이라는 홍익인간의 오랜 뜻이, 다음 100년의 한국을 여는 산업발전의 역동적인 힘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

지정토론

전환과 불평등, 그리고 노동운동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0+기후행동 운영위원)

광복 100년은 2045년, 지금부터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20년을 특징짓는 화두는 전환과 불평등,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는 게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생각이다. 하나같이 우울하다.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단어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다. 디지털·AI 전환과 녹색·생태 전환. 이들 전환은 함께 오는 파도라는 점에서 디지털 녹색전환 혹은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거나 충돌한다. 가령 디지털·AI 전환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배출량 관리, 공급망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반도체 생산의 확대나 AI 데이터센터가 가져오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는 탄소중립의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지체를 부채질한다.

그렇잖아도 ‘디지털 과잉함정에 빠진 최악의 생태국가’(김병권, 『AI와 기후의 미래』, 2025)가 우리나라다. 디지털 전환의 과잉과 생태전환의 지체가 공존하는 나라. AI와 기후 사이의 불균등한 전환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던 나라가 지금은 핵발전소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AI 열풍에 올라탄 성장주의 공세에 밀리면서 기후와 생태는 잊힌 의제가 되고 있다. 날씨 더운 것 정도, 태풍 한 두 개 더 오고 기껏해야 석탄화력발전소 몇 개 멈추는 것 정도, 텀블러와 에코백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SG는 의례적 수사가 되고 있고 ‘실존적 위험’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무역규제가 그나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저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는 있을까. 생태전환은?

전환은 정의로울까

전환의 시대에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은 “전환이 정의로울 것인가?”라는 것이다. 쌍둥이 전환은 노동을 재편한다. 그것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노동조건, 작업방식, 직무와 숙련구조, 작업장 통제, 그리고 노사관계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AI는 청년 일자리부터 타격한다. 청년들은 고용기회는 물론 숙련 형성의 기회조차 잃고 있다. 기후위기가 산업전환을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은 소리소문없이 밀려나고 있다. 녹색 일자리의 창출 못지않게 전환경로의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기술발전은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플랫폼 노동이나 AI 뒤의 ‘보이지 않는 노동’(데이터 라벨러, 콘텐츠 모더레이터, AI 트레이너 등)에서 보듯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사실 AI는 노동을 없애는 기술이라기보다 ‘유령 노동’을 새로 조직하고 낮은 비용으로 배치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클라우드나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호명되지도 못한 채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사회적 보호와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실질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노동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의 과제는 전환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방향과 속도, 비용과 이익의 배분,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환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최적화하고 확장한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에 해당한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일하는 사람의 민주주의’, 즉 산업민주주의를 말하는 이유다.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 권력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탈탄소 생산방식의 도입과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그것이다.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그리고 생산적 정의가 그것이다.

전환이 불평등을 완화할까

AI 전환과 녹색전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부정의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령 AI 전환은 대규모의 자본과 첨단 기술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과 승자독식 체제로 인해 기득권에 유리하게 설계되기 십상이다.

AI는 기후위기와 동행하면서 기존의 권력구조를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추동하고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 지구에 흉터를 남기는 추출식 채굴, 데이터 대량 수입, 거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의 배출, 이를 떠받치는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노동관행”은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더욱 확대한다. 그것은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 내에서 힘의 단층선을 따라 작동한다”(크로퍼트, 『AI 지도책』, 2022).

AI나 탄소중립 투자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양분하고 이는 지역별 산업분포와 소득, 나아가 세대·연령·성별 불평등을 확대한다.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불안정 플랫폼 노동이나 단기 비정규 노동으로 밀려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기존 산업의 숙련을 가진 중장년노동자는 하루아침에 ‘늙은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불평등은 재난이다. “가난이란 …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것. 작은 사건이 큰 재난이 되는 것. 복구가 잘 안되는 것”(김애란, 『이중 하나는 거짓말』, 2024).

성장을 넘어 공유된 번영으로, 민주주의로

AI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듯이 기후위기 역시 자원과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권력구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환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중층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작업장 민주주의, 산업·지역 수준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형 숙의민주주의, 국가 차원의 정책조정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전환정책을 협의·교섭·조정하는 제도라면 시민회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정보제공과 전문가 검토,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만드는 제도다. 물론 사회적 대화와 시민회의를 결합하는 방식도 있다.

전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AI 전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탄소중립·생태전환은 실현될지, 나아가 그 과정이 정의로울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 어느 하나 주어진 결론은 없다. 하지만 AI 전환과 생태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한 운명은 아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 즉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경로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 아세모글루와 존슨(Acemoglu & Johnson, 2023)이 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다. 기후대응 경로도 그렇다.

노동운동은 전환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온통 성장담론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상징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성장과 국가경쟁력, 지역균형은 말해도 불평등 문제를 말하지는 않는다. 전력공급과 용수에 대해서는 말해도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에너지 사용과 핵발전,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을 ‘공유된 번영’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AI 전환이 초래하는 탄소발자국에 대해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전환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노동운동은 기업별 담벼락을 뛰어넘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수행할 수 있을까. 조합원의 편협한 이해를 넘어 노동자 일반의 이해를 추구하고 사회적 연대의 기반 위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껴안을 수 있을까. 흔히 유령노동자라 불리는 AI 발전 뒤에 숨은 미세노동의 담당자들, 클라우드 및 플랫폼 노동자들,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자이자 녹색전환의 주체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유지되겠지만 노동운동도 그러할까?”(Unions may have a long-term future, but do union movements?)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 1990)의 우울한 질문이다.

의제 2

사회·교육

발제

‘광복 100년’ ‘민주’·‘공화’적 국가의 비전을 탐색하며:

민주주의-진보의 공화적 차원, 초국경적 공화의 지향을 중심으로

조희연 (20-22대 서울시 교육감)

I. 들어가면서: 새로운 위기 앞에서

2006년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과 2024년 초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을 상기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나는 이 두 사건을 우리 정치공동체의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이 균열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두 피습 모두 ‘비정상적인’ 개인의 일탈로 판명되었지만, 나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다.

돌이켜 보자. 박근혜의 피습에 대해 진보진영은 ‘선거용 자작극’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선거 압승의 소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반대로 이재명의 피습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이 ‘부산홀대론’, 야당대표 ‘권력남용론’ 등에 기대어 비판하고 넘어갔다. 그 사건의 심각성보다 그것이 자기 진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내재화된’ 정치적 인식에 의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간 것이다.

일상 속에서도 우려할 현상이 나타난다. 얼마 전 4년 사권 커플이 파혼했는데 그 사유가 ‘탄핵 찬반’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김도연 외, 2026). 3년 전 한 조사에서는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40.7%,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본인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로 나타났다(홍영림, 2023).

내가 이런 현상에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적대가 극단화되어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이 균열되고 그것이 대중의 일반적 정서가 되면, 그 공동체의 향방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후백제 시절 신검은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결정은 곧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택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나라의 위기가 그 나라 내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부의 극단적 상황이 외부 요인과 맞물리고 거기에 우연한 사건이 불쏘시개처럼 끼어들면, 사태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는다. 해방공간의 한국은 결국 ‘내전’적 상황으로 발전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독일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세계 정세와 얽히며 20세기 최대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만약 현 단계에서 한국에 극우 정권이 등장해 일본의 극우 세력과 시너지를 일으키고 중·일 갈등의 우연적 변수와 맞물린다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세월호 유족이 “돈도 많이 받아놓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택시 기사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들 자식 말고 기사님 자식이 죽었어야 돈도 받고 나라도 조용하고 좋았을 텐데요”라고 진지하게 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글에 담긴 울분과 연대의 정(情)에 공감하면서도, 나와 입장이 다른 이들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 속이 후련해졌다가 곧 ‘이건 아닌데’ 하고 후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분노했던 대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작은 사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반이 균열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규호가 “시스템 내부에서 생명력이 소진되는 ‘내파(內破)’”(정규호, 2026)라고 표현한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광복 100년을 전망함에 있어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동행이 ‘포용·공존·절제·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의 민주주의진보(이하 민주진보)가 ‘공화(共和)’적 진보, 나아가 ‘국경을 넘는 공화적 진보(트랜스내셔널 진보)’로 새롭게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 진보의 핵심은 ‘평등주의’이며, 70~80년대 이후 진보의 핵심 지향과 원리는 ‘민주주의’였다. 지난 40여 년의 긴 민주화 시기 동안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는 ‘빈 기표(empty signifier)’였다. 이제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K-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광복 100년’의 미래 비전을 천착하는 이 시점에, 나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진보의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60~70년대 이후 민주진보의 시기별 변화와 ‘공화적 진보’

지난 40여 년의 민주화시대(나는 이를 ‘장기 민주화 시대’라 부른다)에 한국의 진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1970년대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선 진보는 주로 **반독재 자유민주적 진보**였다. 1980년 광주학살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며 진보는 더 변혁적·혁명적 지향을 품게 되었다(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을 연상하면 된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진전되며 진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회를 개혁하려

는 **민주개혁적 진보**로 확장되었다(시민운동적 진보도 여기에 포괄된다).

이 세 흐름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다. 나는 자유민주적 진보, 변혁적 진보, 민주개혁적 진보를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유산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흐름과 결합할 수 있는 **공화적 진보**의 차원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민주에서 민주-공화로의 전환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성이 빠진 민주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의한다. 나는 우리가 독재와 싸우고 민주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성(性)은 철저하게 천착했지만, 공화성(性)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성은 민주투쟁성으로 발휘되었다. 적에 준하는 독재와 그 유산에 대항하는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성취하는 사고가 뿌리내렸다. 그러나 80년대부터의 기나긴 민주화의 여정을 지나온 지금, 나는 ‘적’을 (준)군사적으로 제압한다는 사고만으로는 한 국가와 사회를 온전히 리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가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각축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과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공화의 의미: 공동체적 공존

공화(共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학술적 공화주의 정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공화를 설정한다. 공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삶”이라 할 수 있다. 영어로는 togetherness, 한국어로는 ‘공동체적 공존’이다. 급진적으로 확장하면 ‘평등한 공동체적 공존’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

공화국을 단지 ‘민주 국가’의 다른 말로 이해하면 공화는 최소주의적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민주공화국을 ‘함께 사는 민주 국가’로 해석하면, 공화의 적극적 의미—함께 삶, 평등한 공존—가 드러난다.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기독교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불교 연기론(緣起論)의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나의 작용은 행위가 타인과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곧 공화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선·공동선, 공공적 의지에 대한 적극적 참여, 권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적 책무성 같은 덕목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권리·정체성·가치·이해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체제다. 그 자유를 전제로 하되, 자유가 단지 개인·집단 이익의 전투적 극대화에 머물지 않도록, 민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공동체성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민주적 전투성’이 강하게 발현된 사회에

서는, 이 전투성이 자유·권리·이익의 무제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공동체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화는 민주적 전투성에 민주적 공동체성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Ⅲ. 해방 이후의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변화: ‘내전의 정치화’와 ‘정치의 내전화’, 그리고 극우

이재명과 박근혜의 피습을 큰 거시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해방공간(1945~1948)과 한국전쟁 전후까지 좌우익 진영 모두에서 정치적 암살과 테러가 빈번했다. 우익 계열에서는 송진우(1945)·장덕수(1947)가, 좌익 계열에서는 여운형(1947)이, 중도에서는 김구(1949)가 피살되었다. 특히 여운형과 김구의 암살은 남한에서 중도·통일 노선을 대표하던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분단과 냉전체제 고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좌우 청년단체 간 테러, 지방 유자·노동·농민운동가에 대한 암살도 수백 건 발생해 정치 폭력이 일상화된 시기였다.

해방·전쟁·분단을 거치며 남한 내부에는 더 이상 극단적 적대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사회적 조건, 즉 극단적인 분단반공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위에서 1950년대 이승만, 1960~70년대 박정희,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해방공간의 ‘살륙(殺戮)적’ 폭력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여전히 막강한 억압적 통치를 지속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폭력’이 일상화되었고 장준하 피살 같은 국가테러도 존재했다. 민(民)에 대한 국가권력의 ‘전쟁 정치’(김동춘, 2013)의 시기였다.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독재정권만이었고 그들에 의한 국가폭력만이 존재했다. 그람시의 표현대로 통치가 강권적 힘과 헤게모니적 힘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이 시기의 통치는 폭력으로 일면화된 보수 극단주의였다.

저항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이후는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이었고, 저항운동은 완전한—강요된—‘비폭력’적 조건에서 성장했다. 이에 맞서 반독재 저항운동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대중적 지지를 쌓아 올리며 폭압을 서서히 극복해 갔고, 그 클라이맥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80년대에 이르면 보수와 진보가 해방공간과 유사한 ‘각축’ 관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광주항쟁 이후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은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거리에서 국가폭력에 대항했다. 87년 민주항쟁 전야는 국가폭력과 민간저항운동이 대치하는 준(準)내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내전의 정치화’를 성취한 민주화운동이 ‘정치의 내전화’에 새롭게 직면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준내전 상태로 치닫던 한국 정치를 역류시켜 다시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해 냈다는 점이다. 즉 ‘내전의 정치화’다. 최루탄과 진압봉에 화염병과 돌로 저항하던 거리, 독재권력의 거수기

가 된 제도정치—‘무력 대 무력’의 대치 속에서 군사적 노선이 정치와 저항운동의 주도 원리가 될 정도였던 위기를, 6월 항쟁이 직선제 부활과 선거민주주의 복원으로 되돌려 정치가 다시 제도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민주화 시대를 지나온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정치의 내전화’**다. 과거 독재를 옹호했던 보수는 국가폭력의 원죄(광주학살 등)를 가졌기에 민주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굳건히 유지되었고, ‘파죽지세’로 민주개혁투쟁이 전투적으로 진행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반복되고 민주진보가 집권세력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 보수에게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민주진보에게도 나타나며 도덕적·정치적 우위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면서 보수 내부에서 **자발적 극우**가 성장했다. 민주화된 권력을 ‘좌익권력’·‘빨갱이 권력’으로 ‘허구적’으로 인식하는 극우가 등장하고, 이들이 민주진보의 전투적 정치에 대응하며 전투적 극우정치로 나아가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며 적대적 진영정치의 기반이 생겨났다.

민주진보가 완전한 소수자·약자였던 시기에는 민주투쟁적 전투성이 민주주의 심화의 동력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지배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그 그늘에 촉발되어 전투적 극우정치가 출현했고, 그것이 역사적 극우에 자발적 극우의 성격을 더하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내전의 정치화’를 성취한 민주진보가 ‘정치의 내전화’를 막는 데, 헌법 1조가 호명하는 공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의 내전화’의 길목에 극우의 등장이 있다

50~70년대까지 극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폭력적 국가의 ‘동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극우는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일부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는 점이 다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광화문에서는 매주 수만~수십만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심지어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극우집회는 이제 낯설지 않고, 전광훈 목사 그룹이 주도하는 집회는 아예 개신교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극우 내지 정치적 보수주의의 핵심 동력으로 **기독교 보수주의**가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1970~80년대에는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의 친구였으나, 지난 30여 년을 지나 기독교 보수주의가 정치적 보수주의를 떠받치는 보루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우를 자임한 야당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하고 범여권과 범야권이 5:5로 맞서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대선에서 극우적 성향의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 트럼프 재선, 폴란드·일본·남미·영국에서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다행히 한국 시민들은 윤석열의 ‘극우적 비상계엄’ 시도를 ‘빛의 혁명’으로 막아내며 민주진보 정부를 다시 세웠다. 그럼에도 안도하기엔 이르다. 오늘의 극우는 ‘동원된 대중’이 아니라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묻는다. 우리가 자부해온 K-민주주의는 전 지구적 민주주의 퇴행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극우집권은 결과적 현상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적 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만약 독일의 민주주의자들이 1919~1933년 바이마르 시기를 ‘역사의 다른 경로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파시즘으로 향하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나는 가끔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의 상상을 해본다.

극우의 규정

극우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 Cas Mudde의 정의를 원용할 수 있다. 그는 극우의 핵심 이념으로 ① 외국인·이민자·소수자를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토착)주의(Nativism), ②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권위주의, ③ “순수한 국민 vs 타락한 엘리트”를 구분하는 포퓰리즘을 든다(Mudde, 2019). 최영준 교수 연구팀은 극우를 ‘극(권위주의·급진주의·반엘리트주의)’과 ‘우(토착주의·보수주의·반공주의·사회다원주의)’의 7개 속성에 모두 동의한 집단으로 조작적 정의했다(최영준, 2025).

결국 극우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원주의·권력분립·소수자 권리—를 부정하거나 형해화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관에 기초해 ‘국가의 재생’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극우는 냉전적 반공주의, 권위주의 향수, 선거 민주주의 불신, 음모론적 인식을 결합하며, 민주주의 내부의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한다. 극우는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을 이용하지만 그 정신을 거부한다. 현재 한국의 극우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우익’이라기보다 소수자 권리를 부정하는 ‘급진우익’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다. 민족·인종·종교적 차원에서 외부의 ‘이방인’과 내부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 배타성’이다. 나는 이것을 극우 특성에서 가장 중시한다.

‘극우 시대’는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극우적 대중의 출현·확산, ② 극우의 주류화, ③ 극우화된 보수정당의 집권이다. 신진욱 교수는 이를 ‘극우의 주류화, 주류의 극우화’(신진욱, 2024·2025)라 표현했다. 현재까지 세 경향이 완전히 일체화된 것은 아니다. 대중 수준에서 극우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다만 탄핵 반대라는 전투 국면에서 중심부로 떠올랐을 뿐이다. 보수정당 내에서 2025년 극우적 후보로 평가되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었지만 극우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도 존재하며, 극우화된 보수정당의 집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빛의 혁명’으로 민주진보 정부가 수립되었다—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

극우가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확장되는 것, 나아가 주류화되고 집권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선진적’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과제다. 극우정권의 등장을 ‘외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등장의 대중적 잠재력을 응시하고—그 잠재력이 우리에게

게서도 발원(發源)한다는 점을 시야에 넣으며—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예방적 전략이 필요하다.

Ⅳ. ‘장기 민주화 시대’의 성찰적 재분석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하는 공화의 관점에서 ‘정치의 내전화’를 막으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사고를 해야 하는가. 나는 민주진보의 인식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환적 사고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풍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극우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한국의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성장해왔듯, 이제는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에 저항하며 보수 및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 그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며 보완하는 노력, 곧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배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가 ‘천사 대 악마’의 대결이던 시절

우리 사회는 1987년을 기점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그 이전,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정치는 거의 전면적인 ‘선악(善惡)’의 대결구도였다. 많은 학생과 민중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면 당장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독재에 맞섰다. 군부독재 세력은 거의 ‘절대적 악마’로, 목숨을 걸고 해직·투옥·고문을 감내한 반독재 주체들은 ‘천사’에 가까운 도덕적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조금 과장하면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 십자군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부 폭력—프락치로 오인한 학생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1989년 동양공전 설인종 사건, 1997년 한양대 이석 사건 같은—이 거대한 선악 구도 속에서 충분히 문제화되지 못했다. 대중은 그것을 ‘큰 흐름’ 속에서 유보하거나 관용했다. 천사가 저지른 악마적 행위조차 시대의 비극으로 흡수된 것이다.

선악 구도의 해체와 ‘성공의 위기’

그로부터 30~40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도덕적 우위는 더 이상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억압받는 야당이나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에는 그 자체로 희생과 헌신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이제 정치인들에게 민주화운동은 ‘훈장’의 의미가 되었다. 민주진보 세력 역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천사’는 더 이상 천사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변화의 핵심은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거둔 성과 그 자체에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여덟 차례의 정부 교체를 경험했다.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two turn-over)만으로도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되니,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은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나는 이를 ‘실

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 부른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책을 실현할 힘을 갖는 동시에 관료제적 폐해와 부패의 유혹을 함께 떠안는다는 뜻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말이 있지만, 집권한 진보 역시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예컨대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민주진보 단체가 내홍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스물여섯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주택 소유 여부가 거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축으로 자리잡아 특히 20·30세대에게 깊은 좌절을 안겼다. 이 조건 속에서 정치의 언어는 점점 ‘내로남불’로 수렴되었다. 내로남불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야당이던 시절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으로 ‘적’을 비판하면서도 집권 이후 ‘동지’에게는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권력을 상실한 보수는 그 이중 기준을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나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반대편을 비판할 때는 성악설에, 우리 편을 옹호할 때는 성선설에 기대왔다. 상대의 문제는 본질의 발현으로, 우리 편의 문제는 우연이나 왜곡으로 설명해 왔다. 이 이중 기준의 간극만큼 상대가 ‘내로남불’이라 역공할 공간은 넓어졌다. 문제는 이 반복이 적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점이다. **적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적을 강화하는 역설**이 성립하고, 적대적 진영정치는 더욱 공고해진다.

민주적 전투성의 탄생과 그 이면

40여 년의 장기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가장 깊이 각인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독재 체제가 국민을 ‘백성’이나 ‘군기잡힌’ 존재로 만들었다면, 민주화는 개인을 주눅 들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12·3 비상계엄 같은 퇴행적 시도에 거리로 나와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시민의 모습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말 못 하는 사람은 없는 사회”, 이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전투성(democratic militancy)’**이 꽃피는 사회로 변화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적 전투성은 ‘일면적 최대주의’의 그늘을 갖게 되었다. **일면적 최대주의**란 개인 혹은 특정 이해집단의 권리·이익·정체성·가치라는 ‘한 요소’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다. 정당한 가치와 이익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타 집단·공동체적 고려는 약해지며, 정치갈등의 대립 논리와 결합해 쉽게 증폭된다. 여기에는 두 양상이 있다. 하나는 **일면적 최대이익주의**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에겐 이익추구형 권리도 포함되기에 시민은 권리 침해에 저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투적 에너지를 동원한다.

다른 하나는 좋은 가치를 최대주의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 곧 **일면적 가치 최대주의**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인권·평등·정의·다양성 같은 소중한 가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민주화 시대의 가장 빛나는 성과다. 그러나 올바름의 행진에도 그들은 있다. 이 좋은 가치들이 “가능한 최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향 속에서 절대화되고 실천이 경직되며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 일종의 비타협적 근본주의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사의 훈육권을 범죄화한다는 취지로 수십만 교사가 개정을 요구하고, 아동인권·복지단체는 반대한다—하나의 좋은 가치와 다른 좋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과잉 가속은 때로 보수적 반동과 극우적 재결집을 자극하는 도덕적 자원으로 작동한다. 일부 비타협적 근본주의가 왜곡된 방식으로 쟁점화되면서 극우의 확산과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오늘날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대중운동으로서의 극우의 등장은 이런 배경을 갖는다. 따라서 올바름의 행진에도 ‘그들’이 있음을 응시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그 그들은 고스란히 극우 성장의 자양분으로 흡수된다.

V. 햇볕정치와 그 5가지 유형: 포용에 기초한 공존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복합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식틀

이처럼 곤혹스러운 복합적 상황에 민주진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과거처럼 선명한 적을 상징하고 전투적으로 돌진하는 방식만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설명할 수도 이끌 수도 없다. 민주진보는 이제 자기 확신을 성찰로 조정하는 용기, 그리고 전투성을 공화적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핵심 개념은 ‘역지사지(易地思之)형 성찰성’이다. 이는 반대편의 시선에서 나 자신과 우리 진영의 언어·태도·전략을 다시 비추어보는 능력, 곧 ‘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 위에 나는 또 하나의 인식틀, ‘3-7 인식틀’을 제안한다. 정치적 쟁점을 100%의 확신으로 부정하려 하기보다, 70%의 확신으로 싸우되 나머지 30%는 성찰의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 30%는 양보나 투항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일정한 합리성과 진실의 파편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인식의 여지다. “지금은 100%의 확신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70%의 확신으로 싸워야 하는 시대다.”

이런 역지사지형 성찰성을 전제하면 극우 성장의 요인도 다르게 보인다. 나는 극우 결집에 **도덕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본다. 도덕적 요인은 앞서 본 ‘내로남불’ 논란, 즉 민주진보의 도덕적 우위가 균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지적 요인은 지난 40여 년간 형성된 민주진보의 인식틀이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생긴 미스매치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급속히 변했지만 민주진보의 언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며 극우는 ‘토착왜구’ 같은 자신들의 서사를 구축했다. 뉴라이트 역사

해석은 극우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인지적 근거를 학술논리로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극우는 하나의 ‘인지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집을 주로 외재적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이다. 극우 결집의 도덕적·인지적 요인이 민주진보의 한계와 내적 문제에 대한 **미러링(mirroring)**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객관화 위에서만 우리는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심리적·인식적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공화적 정치로서의 햇볕정치

바로 여기에서 민주투쟁적 전략에 더해 공화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해진다. 나는 이를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와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유연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부르고 싶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 바로 이 결합을 요구한다. 공화적 이니셔티브란 진보가 보수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하나의 대립 세력에 머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시선을 회복하는 일이다.

나는 이를 **‘햇볕정치(sunshine politics)’**라 부른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정치적 은유로 삼는다. 적대적 대립 구도를 전제하되 그 대립을 해소하는 방식에서 역발상을 취해, 제압을 넘어 **‘해동(解凍, unfreezing)’**의 정치를 지향한다. 적대의 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그 강박함이 형성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하나씩 녹여내는 전략이다. 극우를 단지 극단성이 아니라 ‘정서-운동-정치의 연쇄’로 포착하고 그 연쇄를 끊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박명림이 말한 ‘공화적 평화’(박명림, 2026)의 공간을 국내정치 내에서 확장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때의 정치는 협의의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제도정치·시민사회·교육 실천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햇볕정치’가 추상적이라 느낄 수 있으니, 나는 이를 다섯 가지 실천 유형으로 예시한다.

1. 음지의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2. 직접민주주의형 햇볕정치
3. ‘내로남불’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4.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5. 이른바 ‘PC 햇볕정치’

앞의 두 가지가 대중의 극단성과 전투성을 포용하는 ‘포용적 햇볕정치’라면, 뒤의 세 가지는 ‘성찰적 햇볕정치’로 분류한다. 이는 기존의 원칙과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보완·확장하는 정치적 상상력이자 실천 방식이다. 예컨대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과감한 협치를, 젊은 세대의 참

정권 요구(송파 사태)에 대해서는 진지한 수용을, ‘내로남불’이 반복되는 사안에서는 스스로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고 공통 규칙을 만드는 노력을, 민주화세대가 위선처럼 비치는 사안에서는 자기희생의 정신을 되살리는 노무현식 접근을, ‘탱크데이’ 같은 사안에서는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과유불급’의 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투쟁 전략과 햇볕정치적 실천을 사안에 따라 배합하는 **유연한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의 결과야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올바름’의 행진에도 그늘이 있다

노동·여성·성·소수자·장애인 인권, 동물권 등 다양한 인권 개념의 확장은 억압되었던 평등의 요구를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정착시켰고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PC의 백래시(backlash)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상대에 대한 극단적 공격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운동 내부에서 절대화 속 극단적 경향과 상호 비판이 생겨나기도 한다. 또 PC를 주장하는 개인·세력의 삶이 그에 부응하지 못할 때 언제나 ‘내로남불’·위선의 틈새가 생긴다(386 부모와 신세대 자녀 간 갈등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다). ‘언더도그마’의 문제도 출현한다. 이 모든 것이 극우의 정치적·사회심리적 자산이 된다. 전진의 그늘에는 언제나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장기 민주화 시대에는 ‘전진’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 전진하는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Ⅵ.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민주시민교육에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지난 30여 년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 지향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군사문화적 국민 대신, 당당하고 주체적인, 때로 전투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다. ‘권리 시민’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전투적 시민’이 이상형으로 제시되었고,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제 민주화 이후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대체가 아니라 확장·심화다. 여전히 비상계엄 같은 권위주의적 퇴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교육은 필수지만, 권위주의적 공동체성이 아닌 민주적 공동체성에 기반한 ‘공화’까지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기존의 권리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권적 권리’ 확장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관계적 권리**’의 차원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화의 그늘로 개인이 새로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최대화하려는

노력만 있었지, 그것을 함께 사는 자유와 권리로 확장하지 못했다. 자유·권리를 전적으로 옹호하되, 그것을 타인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공화적 시민의 핵심 덕목은 ‘역지사지형 성찰성’과 ‘책무성’이다. 이는 타인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는 자기객관화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치열하게 옹호하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이방인·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넓게 보면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상호존중의 가치가 생활화된 시민이 곧 공화적 시민이다. 극우집권시대를 막기 위해 이런 공화적 교육은 학교교육·사회교육·평생교육·시민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공화적 교실교육의 3가지 방향

지금은 현재의 적대적 진영정치가 교육에도 전이되어 학교와 교실이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② 독일식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리를 준수하며, ③ 다양한 견해를 교실이라는 공적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교실에서 학생은 선거권·정당 활동 등 일정한 정치적 권리를 갖지만, 가르치는 교사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크게 제약되어 있다. 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의 원리다. 이는 ① 강압적 교화주입의 금지, ② 현실의 논쟁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논쟁성의 유지’, ③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라는 세 원칙을 제시하며, 보수·진보를 떠나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규범이 되었다. 한국도 이를 수용해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현실의 논쟁을 숨기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

셋째, **혐오의 언어를 넘어서는 교육**이다. 현재 혐오·증오, 일베적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세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친구가 실수하면 ‘너 장애인이야’라고 조롱하고, 남자끼리 몸이 닿으면 ‘게이’라며 성소수자 차별의식을 언어로 주고받는” 식이다. 장애인·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납작한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10대들의 단톡방에서의 놀이형 극우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에 교육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교실에서도 음지를 양지로 끌어와 밈이나 은어가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유튜브 등에 범람하는 혐오·적대 언어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확장된 열린 토론이 정착하려면 **교사의 교육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적 목적의 교사 언행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한 형태의 예시로,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들 수 있다. 첨예한 쟁점에 대해 1 단계에서 찬반 중 한 입장에 서서 토론하고, 2단계에서는 정반대 입장에 서서 토론하게 하는 모형이다. 이는 자신의 논리를 더욱 정교화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미래세대가 적대적 진영정치를 넘어서는 인식적 근거를 갖게 하는 시민적 효과가 있다. 지구촌 전체에서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현실을 넘어서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교육정책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화형 민주주의학교로

교육 영역에서도 최대이익주의적 극단성과 ‘좋은 가치’의 최대주의적 실현이 낳는 그늘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반대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학생 인권을 폭넓게 존중하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왜곡해 교권을 훼손하고, 학부모를 학교 의사결정의 당당한 참여자로 세우는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사적 이해를 앞세워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노동조합의 문제도 이런 원리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이익 확대 노력이 그 자체로 100% 공익적일 수 있었지만, 87년 이후 노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자계급 내부 구성이 분화되면서, 대기업 노조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 및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과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하는 조건에 놓였다. 고용세습의 단체협상 명문화처럼,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20·30세대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빈대 소독을 어느 집단이 해야 하는가’—보건교사인가, 행정실 직원인가, 공무원인가—를 둘러싸고 학교사회에서 일종의 ‘노-노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예화가 아니라, 이런 이익 갈등이 거의 모든 사안에 내재해 표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특히 모든 개인과 집단이 민주적 전투성을 지닌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와 사회의 접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데 외부 주택소유자·임대업자가 반대하고, 특수학교나 탈북학생 학교를 혐오시설로 간주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그 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목표에 비추어 각 집단의 이해를 존중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열린 공화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지난 10~20년의 교육민주화·교육혁신이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민주적 학교로’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화형 민주주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고립되고 각자도생하며, 책임은 사라지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조직적 무책임성’(김영식, 2026)이 나타난다. 학교는 점점 공동체성을 잃고 대입을 향한 속도전의 공간, 곧 ‘입시가속체제’(정용주, 2026)가 되어간다. 이것은 민주화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다. 과제는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당당한 전투성이 공화적 기초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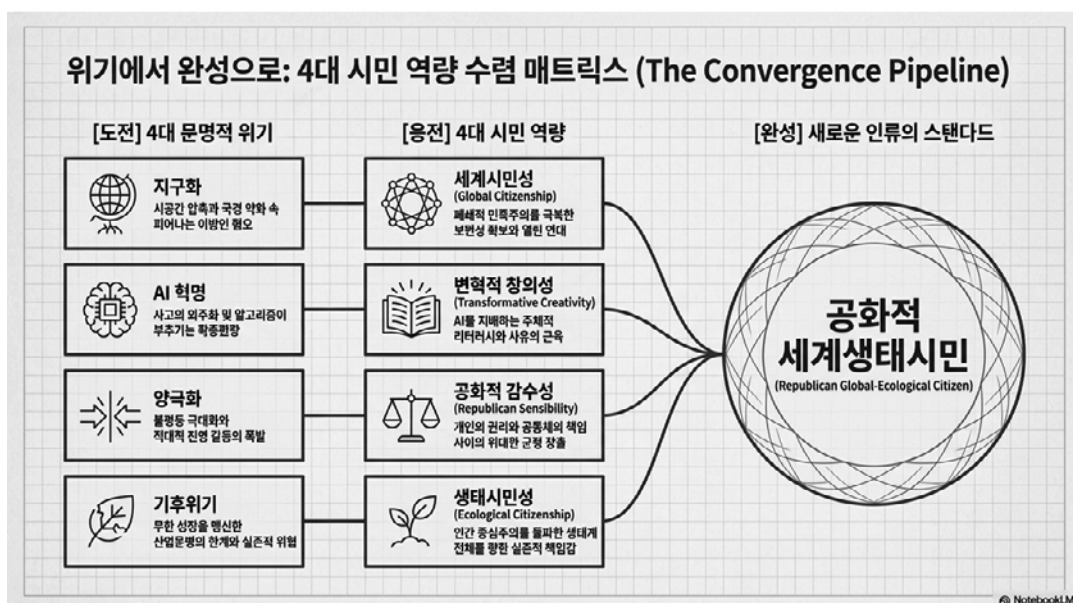
공동체적 최소 공간을 유지하며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민주성과 공화성을 훈육이 아니라 **문화관계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민주적 주체성과 전투성을 담지한 존재가 되었기에, 공화적 덕성을 강요로만 훈육하면 주체성이 훼손된다고 느껴 큰 효과를 갖지 못한다. 민주성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앞에 당당하고 그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역량이라면, 공화성은 그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 공동체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로부터의 퇴행을 막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적 덕성과 공화적 감수성을 회복해 학교를 공화적 민주주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교육이 품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다.

Ⅶ. 광복 100년의 미래시민·학생상

나는 교사·학부모 연수에서 “현재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 제기되는 ‘미래도전’이 무엇인가”를 묻곤 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지방소멸·입시지옥을 떠올리겠지만, 지구 공통의 도전으로 나는 네 가지를 든다. ① 세계화가 한 단계 높아지며 나타나는 지구촌화, ②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대립의 극단화, ③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기술혁명, ④ 근대산업문명의 위기를 상징하는 기후위기다.

이에 응전해 지난 10~20년의 화두였던 민주시민교육의 학생상을 한 단계 혁신해야 한다. 나는 그 미래 학생상을 ‘**공화적 세계생태시민**’, 그리고 AI시대를 살아가는 ‘**변혁적 창의성(transformative creativity)**’을 갖춘 시민으로 제시한다.



- **지구촌화 → 세계시민형 민주시민.** 국경이 무너지고 장소성이 떨어진 세계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열린 민족주의, 나아가 코스모폴리탄적 마인드와 트랜스내셔널 상상력을 갖는 세계시민·지구시민이 되어야 한다.
- **양극화극단화 → 공화형 민주시민.** 양극화의 고통에서 비롯된 불만과 긴장은 이주민·난민·이방인을 향한 혐오와 적대로 표출된다. 미국 의사당 점거처럼 의회민주주의 자체가 망가지는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공존 역량, 곧 ‘공화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 **AI기술혁명 → AI기반 기술역량.** 미래세대는 AI를 이해·활용할 뿐 아니라 고도의 개발역량까지 갖추어야 하며, 그 핵심 마인드가 ‘변혁적 창의성’이다. 동시에 AI가 동반하는 그늘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화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AI가 살상무기와 연계되면 과거의 전쟁을 뛰어넘는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후위기 → 생태시민형 민주시민.** 더 많은 생산·유통·소비를 미덕으로 했던 근대산업문명이 자기파괴적 극단에 이른 지금, 지구 자체를 지키며 생활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생태적 인간이 필요하다.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국민동행의 과정은 교육에서 이런 미래역량을 갖는 신인류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Ⅷ. 광복 100년을 향한 2가지 작은 제안: ‘사회적 상속’과 ‘ODA 증액’

광복 100년을 향한 국민동행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행의 캠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두 가지 주제를 제안한다.

사회적 상속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 판시했고, 이에 따라 무죄와 국가배상·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긴급조치 9호 세대가 뜻을 모아, 30여 년 만에 받은 국가배상금 일부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다(2013년 12월, 아름다운재단 기탁; 나도 참여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 기금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원했고, 마지막 사업은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민주화 활동가를 위한 온라인 교육 교재 제작이었다. 30여 년 전 독일·일본 등 해외의 지원을 받았던 이들이 그 도움을 국경을 넘어 되돌려 준, 일종의 사회적 상속이자 초국경적 협력의 사례다.

최근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586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 운동이 논의되고 있다(조희연, 2022). 1989년 손봉호 교수 등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벌인 ‘유산 안 남기기 캠페인’이

한 선례다. ‘사회적 상속’은 혈연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자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1%·2%·5%·10% 등 다양할 수 있다(10%라면 ‘십일조형 사회적 상속’이 된다). 이는 **자 기희생형 햇별정치**의 한 모습이다. 물론 이것이 구조적 개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속자들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석훈이 말한 ‘알바공화국’(우석훈, 2024)으로 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부운동도 상속공화국을 넘어서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ODA 증액 운동

두 번째는 국제주의적 정신을 담은 캠페인, 곧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운동**과 그것의 파원조국 친화적 정책 요구 운동이다. 한국의 ODA 예산은 최근 빠르게 증가해 2021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5년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GNI 대비 약 0.21%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이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증가 추이

연도	ODA 예산 (조 원)	전년 대비 증가율	국가총지출 대비 비중	GNI 대비 ODA 비율
2021	3.44	-	0.62%	0.16%
2022	4.16	20.9%	0.68%	0.17%
2023	4.78	14.9%	0.75%	0.18%
2024	6.26	31.0%	0.95%	약 0.20%
2025	6.50	3.8%	0.97%	약 0.21%

자료: 기획재정부·외교부·OECD DAC. GNI 대비 비율은 OECD DAC 기준.

그러나 한국의 ODA 규모는 GNI의 약 0.2% 수준으로, OECD DAC 평균(약 0.37%)에도 못 미치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권고해 온 0.7%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4년 ODA 예산 39억 달러로 세계 13위다.

표 2. OECD 주요 공여국의 ODA 규모 비교(GNI 대비)

국가	ODA/GNI 비율(%)	유엔 권고목표(0.7%) 달성 여부
노르웨이	약 1.09	○
룩셈부르크	약 1.00	○
스웨덴	약 0.79	○
독일	약 0.82	○
덴마크	약 0.71	○
네덜란드	약 0.66	△ (근접)
프랑스	약 0.48	×
영국	약 0.50	×
일본	약 0.44	×
OECD DAC 평균	약 0.37	×
대한민국	약 0.20~0.21	×

자료 : OECD DAC,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이런 점에서 나는 ODA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한다. 광복 100주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GNI의 1.1%**(2025년 기준 세계 최고는 노르웨이 1.09%)로 증액하는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겠다. 보수 쪽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ODA 증액운동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떠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간회’적 협력 모델도 가능하다. 아울러 ODA의 활용이 공여국 이익이 아니라 완전히 피원조국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공헌

ODA가 1.1% 수준으로 상향된다면, 이에 발맞추어 한국적이면서 세계에 영감을 주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한국은 ‘교육입국(教育立國)’의 나라다. 과거에는 학교를 지어주고 교사를 파견하는 아날로그형 교육지원이 일반적이었지만, 디지털·AI 기술혁명 시대에는 학습자 스스로 스마트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전기만 연결되면 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난민촌의 학생들까지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공헌을 대폭 확대하면 좋겠다. 나는 **‘스마트 기반 지구촌 의무교육’**을 상상한다. 수학·영어·과학을 넘어 ‘지구시민윤리’ 같은 공통과목을 만들어, 전 세계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난민촌에 있든—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미래를 한국이 선도하면 좋겠다.

그동안은 ‘부자 되세요’·‘잘 살아보세’가 국가적 목표였다. 이제 그 시대를 뒤로하고,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이라는 더 수준 높은 국가 목표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망이 이어지려면 그 실체적·도덕적 기반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IX. 맺으면서

민주진보의 에너지는 언제나 ‘전진’에 집중되어 왔다. 개인과 집단이 각개약진하며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민주진보의 본령이다. 그러나 그 전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늘이 사회 전체에 어떤 부담과 균열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사이 보수와 극우는 바로 그 그늘을 차양분 삼아 성장하고 자신을 재생산해 왔다. 과거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발전해 왔다면, 이제 **는 민주화가 남긴 그늘을 직시하고 풀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내적 한계를 가진 제도다. 국민 각자의 주권적 판단의 총합 위에 서 있는 체제이며, 브렉시트의 선택도 트럼프의 당선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 주권자적 개인은 흔히 ‘일면적 최대주의’에 따라 자신의 최대이익이나 옳다고 믿는 가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일면적으로 매진한다. 지난 장기 민주화 시대에 이

전투성이 발현되어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민주적 전투성’의 그늘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리상 책임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자랑스러운 **민주적 전투성이 민주적 공동체성과 결합**되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민주진보가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을 공화적 이니셔티브 혹은 공존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화적 시선은 이제 **국경을 넘는 공화적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서 ‘성공’한, 근대로의 두 관문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나라다. 한국의 산업화는 압축적인 산업혁명, 민주화는 압축적인 시민혁명의 성공사다. 전후에 이런 역사를 가진 경우는 싱가포르밖에 없고, 중규모 이상의 단일 민족국가에서는 한국이 예외적이다. 그러나 이 이중의 추격은 서구를 벤치마킹하며 각개약진하듯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제 선진국이 된 지금 각 영역 간 불균형·상호모순·종합적 정합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이 부정으로, 대립물로 전화(轉化)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우리가 추격의 여정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제 ‘뒤죽박죽 선진국’이 되거나 과거 제국주의적 선진국처럼 **‘ugly Korea’**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부정적 역사를 직시하면서 긍정의 역사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이것이 광복 100년을 전망하는 우리의 과제다.

내가 재직하던 교육감실에는 신영복 선생이 써 준 서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지남철’이다. “바늘 끝이 언제나 떨고 있다. 여윈 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나침반을 굳게 간직하되 동시에 ‘불안한 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떨리는 나침반으로 북극성을 향한 방향성과 열정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복잡성의 시대를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응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광복100년, 민주공화적 국가의 비전을 탐색하며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1. 발표문 재정

1)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어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상시적 ‘위기 공화국’이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에는 (1)미.소의 군사적 점령과 38도선 획정과 분단, (2)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3)한국전쟁과 대규모 (4)학살, (5)이승만정권의 독재화, (6)5.16군사쿠데타, (7)군사독재의 장기화(3선개헌과 유신헌법), (8)군사독재의 재생산(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 (9)양김 분열과 군사정권의 재창출, (10)3당합당, (11)IMF, (12)노무현대통령 탄핵, (13)한반도대운하, (14)북핵 개발, (15)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나? 발표자는 이것을 민주화 이후 우리 공동체 내부의 격화된 갈등과 대립으로 정의한 후 이 위기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발표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민주적 전투성이 민주화 이후에는 선악 이분법 논리, 상대에 대한 악마화, 상대에 대한 부정 등 전투성의 유산으로 남아 정치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민주화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이 내로남불이 되어 이분법과 결합되어 자발적 극우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역사적 극우가 최근의 자발적 극우와 결합하여 진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우 집권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3)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화 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체득한 발표자는 그간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었던 공화주의의 이념과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발표자는 우리 역사에서 진보는 자유민주적 진보 → 변혁적·혁명적 진보 → 민주개혁적 진보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이른바 ‘민주화의 그늘’이 발생하고, 이것을 자양분 삼아 극우가 발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주의 진보를 공화적 진보(민주공화적 진보) 혹은 글로벌 진보로 확장하여 진보가 공화성과 공동체성을 체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전환에는 민주투쟁적인 이니셔티브를 공화적 이니셔티브로 바꾸고 상대와의 타협과 공존의 여지를 품는 3:7제 민주주의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발표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안한다.

4) 공화주의적 접근의 확장

발표자는 오랜 교육운동의 경험과 현장 교육감 직무의 경험을 이러한 문제의식에 녹여내어 최근 강조되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여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전제로 우리 교육이 역지사지형 토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을 광복 100년 운동과 연계하여 지구촌화, 양극화와 극단화, AI혁명, 기후위기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화적 세계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 몇 가지 재검토 논점

발표자의 가장 큰 덕목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특별하게 발휘되는 뚜렷한 자기성찰성과 매우 폭넓은 이념적 포용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의 발표문에도 이러한 장점이 풍부하게 녹아들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오늘의 발표는 상당한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재구성의 효과를 제공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장되고 충분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주마가편의 차원에서 몇 가지 재검토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위기 규정이나 위기의 성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기의 원인을 민주화운동 내부, 민주화운동의 전투성에 맞추는 것의 적실성 문제

우리는 80~9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를 기반으로 권력이 민주적으로 교체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화가 목표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권력이 목표가 되었고 정책

은 집권의 수단으로 전략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 위기라면 그 위기는 민주화운동의 전투성 때문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우리 사회의 방향 상실과 목표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회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가 광복 100년, 해방 100년의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이 화두를 발전시켜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2) 민주화 이후 세대가 확산되는 시대에 이들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살 이하의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의 세대에 속하며, 이들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가 이념적 디폴트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더해서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화장실 비데, 코스피 지수, 암호화폐 거래 등도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그 자산적 효과를 불안하게 하는 세력은 나쁜 편이 된다. 이들에게 민주화 세대는 권력집단 혹은 기득권집단으로 보인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성공의 위기’란 민주화의 성공으로 혜택을 입은 세대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가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내로남불이 가장 정확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극우가 아니라, 우리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세력일 수도 있다.

3) 민주화에서 포스트 민주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극우 발호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우리 사회는 다층적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민주화, 남북관계, 시혁명, 노동관계, 전통 모두가 전환적 상황이다. 전환기는 무질서와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 혹은 과도기 상황의 일반화는 무리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의 3/4에 해당하는 60년간 극우반공체제였고 초기 40년이 내리 극우체제, 그중 33년이 군사독재였다. 그후 정권이 교대되고 있지만 보수정권은 극우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발표자가 거론한 유럽 극우의 등장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오랫동안 극우 체제에 있었고 지금도 극우와 공존 공생하고 있는 셈이다.

3. 토론자 보충 의견

앞의 재검토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의견에 넉넉히 동의하며 그 필요성과 순기능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 다만, 발표자가 제안한 전환적 사고와 3:7제 민주주

의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대안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상호협력적인 다른 대안적 사고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 세대의 성찰에 당연히 동의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보수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전략의 수립을 제안한다. 닭이 알을 깨는 줄탁동시의 원리는 정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진보와 보수와 다양한 중도가 100% 각축하는 정상적인 정치사회적 구조의 형성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토끼를 잡은 것은 자타공인의 사실이지만, 보수가 보수답지 않고 진보가 지리멸렬한 기형적인 토끼를 잡은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도의 창조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지, 언제까지 분권없는 자치를 고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기본인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불완전한 상황인 만큼 즉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넷째〉, 분단 상황에서 민주화는 그 자체가 완결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만큼 해방 100년, 광복 100년을 향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화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제 3

세대·젠더

발제

젠더와 세대, 전혀 새로운 10대, 그후는?

우석훈 (경제학자)

1.

한국 경제는 ‘압축 성장(condensed economic growth)’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표현된다. 1945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다. 1973년 유신 헌법이 만들어질 때,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다.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이라는 장기 호황 속에 재건을 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기 전까지, 한국 역시 ‘도약’부터 산업화를 매우 빠른 속도를 진행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산업 혁명 이후 몇 백 년에 걸쳐 경제 성장을 한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례가 없어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압축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 사회가 시간을 갖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가는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은 지난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내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 1995년 OECD에 가입할 때, 멕시코가 가입하는 기회에 한국이 편승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개도국 시절,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을 지금 개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압축 성장의 특징은 속도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면서 발전해 온 많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새로운 문제로 과거의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풀어나간 문제보다 새로 생긴 문제가 더 많다. 부동산 문제가 그렇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이런 과거로부터의 특수한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저출생이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지역 경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지금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자영업자 역시 대단히 한국적인 문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자영업이 늘어났는데,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특징이 되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최빈국 시대의 제도, 개도국 시절에 형성된 문화 그리고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난 청소년과 청년들, 이 모든 것들이 광복 80년이라는 시기에 공존하고 있다.

한국 특히 한국 경제의 속성은 속도다. OECD에 가입하던 시절, 21세기가 되면 개도국 시절의 많은 모순점들이 시간을 갖고 해소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졌고, 한일, 한중, 역내 관계는 위기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문제가 젠더 문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제도와 문화가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프랑스나 독일에도 젠더 문제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여성의 경제 참가가 늘지는 않았다. 경제적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는 있지만, 제도와 문화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2. 60년짜리 사이클, 40년짜리 사이클

‘청년의 극우화’는 2년 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다당제 국가이다. 노인들의 노스탈지아에 가까운 국가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극우정당에 청년들이 대거 표를 주었다. 유럽의회에서 사실상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 극우정당이 약진과 함께 녹색당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기계적으로만 분석하면, 적지 않은 숫자의 청년들이 녹색당 대신에 극우정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프랑스는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당이 군소 정당으로 몰락해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지 꽤 된다. 지금은 극우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 정당에 좌우가 모두 표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극우파의 약진을 쉽게 설명하면, 68혁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8혁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노동 운동 중심의

좌파에서 여성, 인권, 환경 등 소위 '신좌파'가 전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 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넓어졌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흐름이 트렌드가 되었다. 프랑스, 독일 등 사민주의가 새로운 집권세력이 되었고, 그렇게 소위 '68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

90년대 동구의 붕괴와 함께 세계화라는 전혀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는데, 이 흐름은 기존의 질서에 많은 균열을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적인 경제적 결과로 글로벌 체인에서 배제된 계층이 생겼고, 중산층이 약화되었다.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국가와 민족을 기치로 하는 새로운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수적으로 68 이후 집권 세력이 된 사민주의 정권에서의 부패와 관료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 강해졌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유럽에서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68이후 오랫동안 청년들이 진보적인 흐름이었지만, 68로부터 멀어지면서 부모 세대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청년의 보수화 혹은 청년이 극우화 등, 68에서 멀수록, 새로운 세대일수록 더 국가주의적이고, 신좌파 의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강하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차이만은 아니다. 영국을 10년째 대혼돈으로 몰고 간 '브렉시트'가 이런 흐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냥 단순한 문화적 사건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일본 자민당에서의 극우 블록의 대약진 등 WTO 중심의 국제 무역은 물론 UN 주도의 세계질서 자체가 재편될 정도의 강력한 변화 요소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68 이후 60년짜리 사이클이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난민 정책에서 촉발되었듯이, 국제적인 문제들이 경제적 이해와는 달리 국가주의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끌어내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중국 문제다. 짧게 보면 세계화의 폐해, 넓게 보면 68 이후의 진보세력의 약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의 선진국보다 전후 '영광의 30년'이 20년 정도 늦다. 유럽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장기 호황이 종료하였는데, 우리는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종료하였다. 사회적으로도 공교롭게 유럽의 68에 해당하는 87년 6월 항쟁이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기계적인 시각이지만, 유럽의 68이후 60년간 겪은 일련의 변화를 우리는 87년 이후 40년간 겪고 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일치한다. 청년의 보수화는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인데, 다만 젠더라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서 양상이 좀 달랐을 뿐이다. 흔히 '이대남' 현상이라고 하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먼저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젠더 투표 현상, 소위 '국민남 민주녀' 흐름이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주로 지지하고,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럽의 60년보다는 짧은 40년짜리 사이클을 지나게 되었다.

3. “엄마도 페미야?”에서 “523”으로

앞으로의 20대를 보기 가장 편한 방법은 지금의 10대를 보는 것이다.

지금의 20대가 10대였던 시절,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엄마도 페미야?”라는 문장이다. 진보적인 엄마에게 안티-페미니스트가 된 중고등학교 아들이 던진 짧은 질문이었다. 이 문장 하나로 소위 ‘멘붕’을 겪은 어머니를 내가 본 사례만으로도 수십 건은 넘는다. 이 10대 남성들의 젠더 문제에 대한 반감은, 영남과 호남에서도 차이가 크게 없는, 거의 전국적 현상이었다. 이 10대들이 지금의 20대 남성이다. 의제에 따라서 지금의 20대는 젠더 양상을 보인다.

지금의 10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523”이다. 여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고, 젠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사가 “우리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지?”하고 질문하면 “523페이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활용형이다. 이 코드 523에는 남녀 편차가 거의 없다.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일이다. 노무현 밈에서는 젠더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30년 청년들에게 가장 격렬한 반향을 일으키는 단어는 조국이지만, 10대로 내려오면 조국 사태는 벌써 지나간 일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다. 문화 현상으로서 노무현만 남는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지난 노무현 추모식에서의 청년들의 난입 사건이다. 문화로서 밈으로서, 523은 10대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10대에서 젠더 편차가 없는 또 다른 현상은 혐중이다. 중국에 대한 보편화된 혐오에서는 젠더 이슈가 별로 없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혐은 보편화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라는 실체와 혐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굳이 현상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의 20대~30대는 정치적으로는 ‘스윙 보터’, 즉 다른 당을 넘나들면서 투표하는 사람에 가깝다. 이걸 개인주의 성향 혹은 이익주의 성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탈정치 혹은 정치혐오주의 같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열성적인 당원이라는 고전적인 정당론과는 잘 맞지 않는 그룹이다. 남성만 놓고 보면, 민주당 성향은 20대 내에서 1/3이 되지 않는다.

10대로 내려가면,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럽식 기준으로는 극우파 정당은 아니다. 드골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당과 좀 더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극우정당이 분화되어 있다. 중도우파와 극우라는 시각으로 다른 정도를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보수당과 극우정당의 관계와는 달리, 한국의 보수 정당은 미분화되어 있다. 한국의 보수를 고전적으로는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로 나누었는데, 이 두 그룹이 보수당 내에서 공존하며 한국의 보수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 노무현과 혐중을 두 축으로 하는 지금의 10대와 국민의힘은 잘 맞지 않는다. 아마 유럽식 극우정당이 한국에 존재했다면, 지난 유럽 의회

선거와 유사한 폭발적 반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그냥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모습을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야구라는 단체 경기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전면화된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어느 학교, 특별한 어느 10대 집단의 일은 아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되었다.

사회과학자로서, 지금 한국의 10대를 본다면,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5~6학년의 김일성 놀이로 시작해서, 협종 놀이와 노무현 밭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쯤은 '완성형 극우'가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민주당 성향을 가진 학생이 1명이라는 고등학교들도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 방송에서 10대를 초대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방송을 하고 난 후, 그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지금의 사교육 체계와 영어유치원으로 대표되는 고가화된 영유아 교육, 중학교에 집중된 특목고 준비, 이런 10대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기에 AI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공포는 상상초월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있는 여학생이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제대로된 여성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경제의 속성, 그런 구조적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이 "고향 탈출"을 꿈으로 갖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앞으로 생겨날 변화들

스웨덴 극우파 정당의 이름은 민주당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름만 그렇고 전형적인 극우정당이다. 영문 이름만 높고 보면, 국민의힘의 영어 이름은 '피플 파워', 전형적인 좌파 정당의 이름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스웨덴 민주당이 스웨덴의 주거권 문제에서 맨 앞에 있는 정당이기도 하다. 주거권은 대표적인 진보 의제이지만, 스웨덴에서는 이 문제를 극우파 정당이 가장 열심히 싸운다. 실제 당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서, 결국 당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위스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국민투표까지 가서 이라크 파병을 막은 것도 결국 스위스 극우파 정당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유럽의 극우파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어느 정당보다도 더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처음 등장한 유럽의 극우 정당이 가진 30년 역사는 그냥 무시할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10대들이 극우화 되면서 생겨날 가장 단기적인 통일 담론에 대한 변화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북한은 그냥 적이다. 여성부가 폐지 위기를 겪은 것처럼, 통일부도 존속되기 어려운 부처가 되었다. 통일에 대해서 어

땡게 사회적 질문을 하고 토론할 것인가, 이게 단기적인 변화다.

많은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10대의 변화에 따라 기관 자체가 위기감을 겪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닐까 한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자신들이 받을 수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적극 재정과 복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의 보수화가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복지 제도 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다. 연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설령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이 늘어나는 중이다. 연금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복지 제도 설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보수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이 될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장기적인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의 역내 평화에 대한 문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역내의 경제적 번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중일의 평화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일본의 협증이 늘어나고, 이를 보완하려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극우화된 청년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사소한 문제로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을 치루고, 역내에 전쟁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 유럽의 노력들이 지금의 장기간에 걸친 역내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중일은 서로 경쟁 중인 산업이 너무 많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계 전역에서 갈등 중이다. 힘이 센 나라들이 너무 가까이게 많이 붙어 있다.

5. 다시 기본으로!

10대의 극우화는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금 해소한다고 해소할 성격의 변화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고, 일순간에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집단으로 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노획화된 정치 구조가 빠른 시간에 청년 중심으로 권력 구조 재편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90년대 처음 극우 정당이 등장할 때 유럽은 '나치당'의 출현이라고 경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후 30년이 지나서, 새로운 극우 청년이 등장했고, 정치적 지형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토론하고 타협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 이게 민주주의다. 서로 한국이라는 한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같이 만들어나가는 사회, 이게 광복 80년 이후 또 다른 8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다음세대일수록 점점 더 보수화되는, 본격적인 선진국 트렌드 위에 올라타 있다. 다시 기본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Ps. 전공에 대한 보조 전공으로 10대 연구를 선택한지 30년이 지났다. 10대 연구는 내 평생 만나본 모든 주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주제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 가지를 알았다. 압축성장이 특징인 한국에서, 이전 세대와 같은 10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직까지는.

지정토론

우리 안의 빛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혜영 (21대 국회의원 | 정의당)

들어가며

광복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로 함께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는 ‘국민동행’ 토론에 세 대와 젠더 부문 토론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 100주년까지 약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이같은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무척 뜻깊습니다.

1945년 광복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비추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광복은 그것이 사건으로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미래상은 일제 강점기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방향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밝혀준 빛입니다. 당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빛을 상상하고 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의 뜻을 기리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빛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에 대한 독해: 세계적 흐름으로서의 ‘청년의 보수화’와 ‘10대의 극우화’, 집권 세력에 대한 회의

발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발제는 우선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를 “압축 성장”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압축이란 “유럽의 60년”과 비교한 평가입니다. 발제문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

들의 '68 혁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소위 근대 국가들에서 일어난 '68세대의 기득권화'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진보세력의 약화', 동구권의 붕괴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폐해를 소략하며 이를 '유럽의 60년'이라 규정합니다. "기계적인 시각이지만 유럽의 68이후 60년간 겪은 일련의 변화를 우리는 87년 이후 40년간 겪고 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일치한다." 이 관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난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발제문은 청년들이 진보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을 '청년의 보수화'라고 규정합니다. "청년의 보수화는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인데, 다만 젠더라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서 양상이 좀 달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먼저 벌어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젠더 투표 현상', 즉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발제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발제의 결론은 '앞으로 생겨날 변화들'과 이를 대비한 방침으로 향합니다. 앞으로의 20대를 보기 위해 현재의 10대에 주목해야 하고, 현재 10대들의 '반 노무현'과 '혐중'은 젠더 편차가 없으며, "아마 유럽식 극우정당이 한국에 존재했다면, 지난 유럽 의회 선거와 유사한 폭발적 반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미래의 가능성에는 회의적입니다. "10대의 극우화는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금 해소한다고 해소할 성격의 변화가 아니다." 그 핵심 이유는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발제는 이를 '선진국 트렌드'로 받아들이며 "토론하고 타협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안 찍는다고 '청년의 보수화' 논하기 전에 양당의 가치 상실을 말해야

우선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가 광범위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 필연성을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이전 세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복합 위기 시대의 타임라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위기는 비슷해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유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렇기에 위기에 맞서나가는 방식 또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답인 것이 다른 나라들에는 답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기 앞의 어둠을 헤쳐나갈 자

신의 빛을 찾아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청년의 보수화’ ‘10대의 극우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미가 풍화된 언어가 일으키는 착시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 국민의힘을 찍으면 보수’. 이걸 뒤집으면 ‘민주당을 안 찍으면 보수’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청년의 보수화’가 등장합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칭하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는 가치의 언어가 아닌 지 오래입니다. 두 정당의 정책적 노선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없이 좁습니다. 양당 모두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방산 수출을 지원합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보완입법에 무관심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우리 진영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 진영의 잘못에는 혐오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싸우기는 끝없이 싸웁니다. 지금도 재선거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싸우지만, 가치투쟁보다 권력투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의미하는 ‘진보’와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보수’는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입각한 정책적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진영을 지칭하는 발음기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보수화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단어는 가치와 의미로 차오릅니다. 그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 정당을 지지했을 뿐인데 온갖 보수적 가치의 담지자로서의 청년이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청년 세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보수 표심으로 표상된 청년’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특히 남성 청년들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청년의 보수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청년의 보수화를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가 충분히 말해야 하는 것은 비전을 잃은 586세대, 아니 686세대의 방향입니다. 거약을 무찌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적인 빛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힘을 잃은 세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청년은 보수이거나 극우라고 쉽게 단정하는 세대. 서울 교육감은 2010년부터 16년째 계속 ‘진보 교육감’ 시대를 이어왔는데, 도대체 그 16년간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이 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세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의 장이 특정 정치인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 힘 있는 세대의 방향과 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의 보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는 시간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금씩 말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발제문은 젠더보다는 세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논지를 풀어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문제가 젠더 문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제도와 문화가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류 정치학적 관점에서 젠더를 논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젠더 문제', 즉 성차별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권력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말할 수 없던 문제를 이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람들이(어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마치 문제인 것 같은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젠더 문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싶습니다. '젠더'는 문제가 아닙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과 달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별 인식이라는 의미의 '젠더'라는 개념이 주창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별 이분법과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강요된 문화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젠더 문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맥락을 살리기보다, 뭔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문제는 고착된 성차별과 성별규범인데, 마치 그와 별개로 '젠더'라는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 그리고 그 외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성별규범을 넘어, 성별을 막론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성평등 담론의 공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란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성평등, 젠더평등이란 여러 정책의 한 부문이 아니라 삶과 사회 전체를 재규정하는 하나의 관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이 유명하지만, 저는 성평등은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 광복 100주년의 새로운 상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가며

광복 직후에 쓰여진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러나 글의 전문에 비추어보면 이는 문화에

대한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 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탕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 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세대와 젠더 관점에서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토론을 열어가는 마음가짐을 저는 바로 이 글에서 찾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힘입니다. ‘압축 성장’의 시간 속에서 지금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와 젠더가 가진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화합과 공존의 빛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찾아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